

## ■ 이해찬 장관 신입생 대상 편지발송 사건(1999.2)

- <성명> 이해찬 장관은 신입생 대상 편지발송을 즉각 철회하고 대학생과 국민앞에 사죄하라(국민승리 21 학생사업단)
- 이해찬 교육부 장관의 신입생 대상 편지 발송 계획 규탄 성명서(서울대총학생회)
- 이해찬 교육부 장관님께 드리는 글(서울대 총학생회)
- <논평> 교육부 장관의 반인권적인 처사에 반대한다(청년진보당 인권위원회)
- 인권하루소식 1999년 3월 9일 1322호 <인권시평> 국민정부 교육부장관의 교육관과 인권관

\* 일시 : 1999년 2월 22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5층

\* 내용 : 이해찬 교육부 장관 편지발송 계획 철회 촉구 촉구 촉구

사회 : 서울대 총학생회(02-580-5222)

기타 : 국민승리21 학생사업단(02-389-8222)

발안 :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서명 :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발안 :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발안 :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서명 :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구인 :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김민준

1999년 2월 20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02-580-5222-4)

국민승리21 학생사업단(02-389-8222)

# 보 도 협 조 요 청 문

## 이해찬 장관 신입생 대상 편지발송 계획 즉각 철회 촉구 및 신입생 대상 공개토론회 제안을 위한 집회 개최

- 국민승리21 학생사업단과 서울대총학생회 공동 개최 -

국민승리21 학생사업단(단장 박용진)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총학생회장 박경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이해찬 교육부장관의 대학신입생 편지발송 문제와 관련해 규탄집회를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해찬 노동부 장관이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생운동에 대해 날카로운 선입견을 강요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할 계획에 반대하는 이 집회는 교육부의 편지발송 계획의 즉각 철회와 이해찬 장관의 공개 사과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두 단체는 교육부장관과 교수 학생, 사회단체등이 참가하는 '학생운동 평가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대학신입생을 대상으로 열 것을 제안할 예정이다.

- ▶ 일시 : 1999년 2월 22일 오전 10시 30분
- ▶ 장소 :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
- ▶ 내용 : 이해찬 교육부 장관 대학신입생 편지 발송 계획 철회 촉구 대회

-사회 서울대 공대학생회장 김수정

-의사 국민승리21 학생사업단장 박용진

-발언1 교육부 장관 신입생 편지 발송 98년 사례와 악영향에 대한 비판  
서울대학교 자문대 수석위원 김시우

발언2 학교육성정책에 대한 문제제기 시범대 학생회장 박준호

발언3 교육부 장관 참가하는 '학생운동 평가와 사회적 역할, 공개토론회 제안'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박경렬

-규나 심병서 낭독 동아리연합회장 김경아

1999년 2월 20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02-880-5222~4)

국민승리21 학생사업단(02-369-8822)

# ● 국민승리21학생사업단

■전화: 369 8822(대) ■전송: 369-8823 ■학생사업단(지): 369-8827 ■남장 박용진 ■ID 진보학생(나우)

## 성 명

### 이해관 장관은 신입생 대상 편지발송을 즉각 철회하고 대학생과 국민앞에 사죄하라

신보정당을 준비하는 국민승리21 학생사업단은 이해관 교육부장관이 99년 신입생들에게 '학생운동과 접하지 말 것'을 '충고'하는 편지를 발송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진다고 하는 일국의 장관이 갖 대학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에게 7쪽 분량의 방대한 편지불 통례 "일부운동권 선배들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불법 폭력시위를 마저 학생들만의 권리이사 소외된 이웃과 북한 농포를 위한 당연한 희생인 것처럼 부추긴 것"이라며 요주의와 경계를 당부했다고 한다. 또한 언론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그 편지에는 "지난 96년 8월에 있었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연세대 점거농성사태를 상기시키고 분단조국의 현실을 가슴 아파하고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젊은 학생들에게 당연한 일이지만 이적단체도 규정된 한총련에 가입하거나 폭력시위에 참가한 경우 치러야 하는 형사처벌 등은 예상보다 훨씬 가혹하다"며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협박'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이해관 장관은 마치 현재의 학생운동이 폭력을 일삼는 무장폭도들이 것처럼 매도하며 그 자신이 학생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현재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 그의 논리이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바뀌었는가.

바뀐 것이 있다면, 권력의 핵심부에 안착하여 더 이상 사회진보와 민주회보다 자기 권력의 안정성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보수세력으로 그 자신이 바뀌었다고 솔직히 실로해야 할 것이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의사표현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그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의 정부'를

# 이해찬 교육부 장관의 신입생대상 편지 발송 계획 규탄 성명서

우리는 이해찬 현 교육부 장관이 99년 신입생들에게 '학생운동과 절하지 말 것'을 '충고'하는 편지를 발송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접하고 놀라움과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한 나라의 교육을 책임진다고 하는 일국의 장관이 갖 대학에 들어오는 신입생들에게 7쪽 분량의 방대한 편지를 통해 "일부운동권 선배들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불법 폭력시위를 마치 학생들만의 권리이자 소외된 이웃과 북한 동포를 위한 당연한 희생인 것처럼 부추길 것"이라며 요주의와 경계를 당부했다고 한다. 또한 언론에 발표된 바에 따르면 그 편지에는 "지난 96년 8월에 있었던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의 연세대 점거농성사태를 상기시키고 문단조국의 현실을 가슴아파하고 소외계층에 관심을 갖는 것은 젊은 학생들에게 당연한 일이지만 이적단체로 규정된 한총련에 가입하거나 폭력시위에 참가할 경우 치러야 하는 형사처벌 등은 예상보다 훨씬 가혹하다"며 친절하게 알려주면서 '협박'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이해찬 장관은 마치 현재의 학생운동이 폭력을 일삼는 무장폭도들인 것처럼 매도하며 그 자신이 학생시절에 민주화운동을 했던 것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만, 현재는 시대가 바뀌었다는 것이 그의 논리이다. 하지만 과연 무엇이 바뀌었는가.

바뀐 것이 있다면, 권력의 핵심부에 안착하여 더 이상 사회진보와 민주화보다 자기 권력의 안정성만을 추구하고자 하는 보수세력으로 그 자신이 바뀌었다고 솔직히 실토해야 할 것이다. 집회와 결사의 자유는 국민의 의사의 표현의 기본권이다. 하지만, 우리사회에서는 그 기본적인 권리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국민의 정부'를 자처하는 김대중정권 역시 노동자, 학생의 정당한 요구를 위한 집회를 공권력을 악용해 무력진압기를 서슴치 않아왔다. 학생들의 시위가 평화적이지 못했다면 그것은 학생운동의 폭력성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현 정권의 문제에 다름아닌 것을 이해찬 장관은 호도하고 있다.

심지어 교육부 장관은 "1, 2학년때는 지리산 등 국토를 순례하고 고철을 찾아 새벽의 인경소리를 듣거나 해외로 배낭여행을 떠나는 등 건문을 넓히되 3, 4학년때는 전공공부에 몰두하길 바란다"는 충고로 편지를 끝맺었다고 한다. 이 무슨 훈수인가. 훈수인가. 신자유주의 사회재편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등록금이 없어 휴학생이 속출하는 현재의 대학교육 현장에 대해 주무장관이 얼마나 무지하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실소를 금치 못할 따름이다.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진정 한국 대학사회를 걱정한다면 국민의 혈세를 휴지로 낭비할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 교육부장관답게 현 경제위기상황에서 고통받는 많은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개혁에 매진할 것을 충고하는 바이다. 이에 우리는 신입생을 상대로 몰상식한 학생운동매도 행위로 많은 학생들과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 사태에 대해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분명히 책임질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우리의 요구안을 밝힌다.

하나.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학생운동을 매도하는 신입생대상 편지발송작업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이해찬 교육부 장관은 자신이 초래한 불미스러운 사태로 인해 많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초래한 사태에 경허히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전국민 앞에 사죄하라.

하나. 만일 이해찬 교육부 장관이 진정 학생운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몇몇처 못하게 뒤에서 호박씨 까는 듯한 여론호도가 아니라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학생들과 공개적으로 토론하는 장에 나서야 할 것이다.

1999년 2월 22일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진보성당을 준비하는 국민승리21 학생사업단.

자처하는 김대중정권 역시 노동자, 학생의 정당한 요구를 위한 집회날 공권력을 악용해 무력진압키를 서슴치 않아왔다. 학생들의 시위가 평화적이지 못했다면 그것은 학생운동의 폭력성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조차 제대로 보장하지 않는 현 정권의 문제에 다름아닌 것을 이해한 장관은 호도하고 있다.

부듯 고여있는 불은 썩기 마련이다. 우리사회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전에 비해 민주화의 전진이 있었음은 분명한 일이나 이것은 그저 기다려 얻어진 것이 아님을 그 자신 또한 잘 알지 않으나, 그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사회의 현실을 바꾸고자 했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우리사회가 이나마의 민주화를 이룩하게 된 것에 다름 아니다. 그속에서 특히 학생운동은 젊은이다운 폐기와 열정으로 바로 그런 헌신과 희생에 앞장서 왔으며 이는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보다 나은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청년세대가 젊은이다운 비판과 실천을 하지 못한다면 우리사회의 미래는 어서너썩는가.

심시이 교육부장관은 "1, 2학년때는 지리산 등 국토를 순례하고 고참을 찾아 새벽의 인경소리를 듣거나 해외로 배낭여행을 떠나는 등 건문을 넓히되 3, 4학년때는 전공공부에 몰두하길 바란다"는 충고로 편지를 끝냈었다고 한다. 이 무슨 훈수아닌 훈수인가. 신자유주의 사회재편속에서 많은 국민들이 생존권의 위협을 느끼고 등록금이 없어 휴학생이 속출하는 현재의 대학교육 현장에 대해 주무장관이 얼마나 무지하기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실소를 금치 못할 따름이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진정한 한국 대학사회를 걱정한다면 국민의 현세를 후지르 남비할 망상에서 빨리 벗어나 교육부장관답게 현 경제위기상황에서 고통받는 많은 학생들의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개혁에 매진할 것을 충고하는 바이다.

간으로 나시 한번 국민승리21 학생사업단은 이해찬 교육부장관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이해찬 교육부장관은 99년 신입생에의 편지작업을 중단하고 사신의 파쇼적 행태에 대해 즉시 전국민 앞에 사죄하라. 우리는 이번 이해찬 장관 편지사건에 관한 교육부의 책임지는 모습을 촉구하며 이를 위해 선국의 학생운동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1999년 2월 19일

진보정당을 준비하는 국민승리21 학생사업단

서울대학교 총학생회 / 서울시 관악구 신림 9동 산 56 1 .880-5222-4

발신처 : 42대 서울대 총학생회

발신일자 : 1998. 02. 19

수신 : 각 언론사

참조 :

제 목 : 이해찬 교육부 장관님께 드리는 글

1. 이번 이해찬 교육부 장관님의 '신입생에게 보내는 편지'에 대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의 인준입니다.
2. 특히, 사면에 이어 계속되는 교육부의 시골학교 반상에 대한 비판 세가지와 교육부 장관으로서 진정 걱정하고 단정해선책을 고민해야 할 과제 세가지를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3. 글 순위를 첨부합니다.

### 이해찬 교육부 장관님께 드리는 글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 박경열

2월 18일 신문에서 우리는 또하나의 실망스러운 기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운동권 출신' 교육부장관님께서 친히 대학 신입생들에게 드린다는 서신은, 세상의 모든 것과 정면충돌하고 보여해야 할, 마야호로 질풍노도의 시기에 접어드는 신입생들에게 고자 운동권을 조심하라는 진절절한 조언만을 남기고 있었습니다.

신입생에게 교육부장관의 서신은 어마어마한 권위로서 다가올 것은 자명할 것입니다. 한국 공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분의 당부 한 마디 한 마디가 신입생의 머리 속에 깊이 박힐 것 또한 사명할 것입니다. 그만큼 권위를 바탕으로 쓰여있는 글의 내용은,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학생운동을 삼가해 주길 부탁한다. 일부 선배들은 주저 불입시위에 가담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를 자세히 알려주지 않으며, 시위에 참가하는 것은 내학생의 특권이자 국가와 민족을 위한 당연한 의무라든 부추기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96년 8월 연세내 한총련 사태를 보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에 가담한 사실로 받게 되는 형사처벌은 예상보다 훨씬 부겁다. 1, 2학년 때에는 강원도 산골, 남해안의 섬, 지리산 끝까지를 여행하고, 절에 가서 세태의 인성소리를 듣거나 해외로 배낭이

행을 떠나는 등 건분을 넓히되,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는 창의적인 직업을 필요로 하는 만큼 3, 4학년이 되어서는 전공에 몰두하길 바란다."

우리는 우선, 작년에 이어 계속되는 교육부의 치졸한 반상에 대하여 지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교육부장관님의 서신은 국민 누구나 인정하는 한국 학생운동의 상징적인 년, 민주주의를 앞당겨 온 투쟁의 역사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최근의 불미스러운 사태만을 초심으로 삼아 학생운동의 전통과 대의를 전혀 무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장급 교수의 급 중 시업적인 부분만을 분제심유으로써 국민적 망신을 당하고 결국 법원에서 준엄하게 심판된 조선인보의 사태보다 선코 년하지 않는 치졸함입니다.

둘째로, 김대중 대통령의 소신으로 알려져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이상화하고 이에 반하는 자들을 모두 범죄자들로 취급하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존속으로 인하여 그 의미가 죽어버린 사상의 사유를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지난 군부정권 시대를 관통했던 위일주의와 파시즘과 본질적으로 다를 바 없습니다. 실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절대 선이라고 할지라도 지난 1년 동안 국회 한 번 제대로 열리지 않았던 한국 사회에 '자유민주주의'가 존재했는가들 반문하고 싶습니다. 또한 실업자가 3배만을 세아리고 서울의 노숙자가 2천명에 이르며 시민들은 전국 이레 최대의 경제난을 감내하는 와중에 재벌을 위시한 기진 지들의 위세는 노노하기만 한 우리 한국 사회에 제대로 된 '시장경제체제'가 존재했는가들 반문하고 싶습니다. 교육부 장관님의 편지는 지금의 이 기박한 현실에 빚서미 보나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고자 하는 학생 운동에 대하여, '형사처벌'이라는 듣기만 해도 섬찟한 말들로 신입생들에게 겁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치졸함입니다.

셋째로, 교육부 장관님께서 대학생들이 내 학년마다 힘써야 할 사항들까지 차근차근 정리해주는 것은 대학 신입생은 초등학교 학생 취급하는 것입니다. 대학은 젊은이들의 꿈과 낭만이 넘쳐야 하며 스스로 자신의 삶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계획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어야 합니다. 서신에 쓰여있는 그러한 식의 당부는 신입생의 부모님들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충고이며, 신입생 스스로 사색과 행동을 통하여 질정 한 일입니다. 교육부장관님이 하신 말씀은 따도 있지 않습니까? 더 크고 더 넓은 이야기들을 해 주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상세한 당부의 말씀은 부연가 다른 의도들, 신입생들을 선배들과 대립화로부터 유도시키고, 이 사회가 요구하는 무한 경쟁의 논리를 바탕으로 소위 고압노동력으로 성장하라는 의도를 감추고 있지 않음이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의심하는 우리 역시 함께 치졸해질 수밖에 없게 만드는 서신의 치졸함이 안타깝습니다.

대학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모습들과 그에 대한 모든 논의들에 대하여 교육부장관님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폭력 시위, 이석심 등의 일면적인 비판을 충분히 인정하지만, 그와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갖가지 교육 행정상의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가장 먼저, "신자유주의적인 교육 구조조성을 해 나가겠다"는 언급을 하신 교육부장관님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민영화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정리해고나 노동시간 유인화 등이 바로 강제 영역에서의 신자유주의라면, 교육의 영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그래도 사회 기득권으로 편입되기 위한 졸업장 공장으로 진락해 가고 있는 이 사회의 대학의 현실을 되짚어볼 때, 과연 그러한 논리가 옳으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교육의 영역을 무자비한 시장의 원리가 지배하는 것에 대해 명백히 반대합니다. 교육은 백년지대

제라는 옛 이념의 발췌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한 사회가 젊은이들을 가르치고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게 하는 과정은, 사상의 원리로 판단될 수 없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둘째로, 시금 교육부가 추진 중인 국립대 구조조정요지는 대학별 기능화와 학부제역 확대, 그리고 그에 따른 시인간의 차등화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몇년 전부터 성급한 원정과 대중적이지 않은 논의—이는 많은 교수님들이 지적하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로 인하여 학부제가 많은 문제점들을 안게 되리라고 주장했고, 이미 후유증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기계적인 학과간의 전합과 그에 따르는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미 많은 희생들이 불만을 드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국립대 특별회계법안은 명백히 교육의 문제론 시장의 원리에 의해 해결하겠다는 목적을 가진 법안이며, 마땅히 철회되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시학 세난의 비리 행태도 인하여 이미 국민들은 교육부 관료들에 대한 신뢰를 잃은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사학의 정상화를 위하여 지난 1990년 개악되었던 사립학교법이 실질적으로 개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1. 정도의 문제로 논의가 분분하다고 합니다. 땅에 떨어진 교육부의 신뢰를挽回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정 작업은 진정 사학 정상화를 위해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외국에 도피 중인 일부 재단 이사장들에 대한 가차없는 처벌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운동권 조신을 운운하는 시신을 보고 할말을 잃었습니다만, 이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대학은 이미 경쟁력의 측면에서도, 그리고 학문·연구의 측면에서도 학생들의 발전을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료적인 대학 행정은 대학생의 발전을 저해할 뿐입니다.

1. 교육 장관님이 우려하시는 학생운동권의 주요한 요구 중 하나가 대학의 민주적 운영을 보장할 수 있는 대학평의회제의 민주적 구성과 최고 의결기구화입니다. 비준어진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학생들의 진정한 고민들은 혹시 집하지 못하셨는지요. 신성 학문·연구가 기쁨이 되고 의미가 되는 대학을 원하신다면, 참나운 민주주의의 원리에 입각하여 대학의 분체를 바라보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와 같은 교육행정상의 난점, 이해관 교육부 장관님 취임이후에 더욱 심화되고 있는 문제들을 앞에 두고서 교육부 장관으로서 이에 대한 책임있는 언시는 못한 '양성 고석 신입생들에게 "'과 '입'을 붙이 막고 산다'라고 밖에 하신 말씀이 없으신지 서피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작년의 17 것과 그리 다르지 않은 내용을 제탕해 장관님의 이름으로 신입생들에게 보낸다는 사실에 부끄러움마저 느낍니다.

지난 수 십년간의 역사적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긴고도 지난한 투쟁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입생들에게 교육부장관님의 명의로 된 서신은 보내는 인 나위는 이제 그만 삼가주시요, 장의적인 시성인으로 반물음하러는 신입생들의 마음 한 구석에 보나시 권위적인 시신을 드니우리는 일은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우리는 언제까지나 함께 고민하고, 함께 토론하고,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수신 : 각 언론사 / 일시 : 1999. 2. 22 / 담당 : 인권위원회 김미화

## 논 평

### 교육부 장관의 반인권적인 처사에 반대한다

- 「대학신입생에게 보내는 교육부 장관의 편지 (조선일보 2.18)」 보도에 부쳐

1. 한마디로 어불성설이며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이해찬 장관이 대학 신입생들에게 보낼 것으로 알려진 편지는 구정권이 답습해 온 행태를 반복하는 것에 불과하다. “한총련 가입이나...폭력시위 가담이 개인의 파멸과...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게 될 것”는 경고성 메시지는 갓 입학할 대학신입생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2. 왜냐하면 대학신입생들의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상탐구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러한 제 권리를 보장할 책임에도 불구하고, 구래의 행태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은, 정부의 인권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예일 뿐이다. 교육부 장관은 잘못된 관행과 저열한 인권의식을 뜯어 고치는 것부터 진정한 인권보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이 시작될 것임을 자가해야 한다.

# 인권하루소식

1999년 03월 09일 (화)  
제 132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이주영

## <인권시평> 국민정부 교육부장관의 교육관과 인권관

이해찬 교육부장관이 대학신입생들에게 편지를 보낸 것에 대하여 항의와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서울대나 고려대 총학생회에서 교육부와 언론사에 항의서한을 보낸 것은 그 시작일 뿐이었고, 급기야 이 장관이 3월 4일 예정되어 있던 한양대에서의 교양선택과목인 <청년문화 특강>의 일일강사로 초빙되었다가, 학생들의 반발 때문에 강의를 취소하고 총장들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던 부산대에는 학생들의 정문 봉쇄로 들어가가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기에 이르렀다.

어찌 보면 하나의 해프닝으로 치부할 수도 있고 전례가 없는 일도 아닌데 그렇게까지 문제될 것은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태가 그 수장이 인권대통령으로 불리우기를 원하는 자칭 '국민의 정부'에서 그것도 가장 개혁적인 인사라는 교육부 장관이 한 일이라는 데서 그 문제는 심각하다 할 것이다.

### 인권과 교육은 불가분의 관계

인권이라는 개념은 당연히도 인간에 대한 생각에서 출발한다. 인간을 존엄한 존재로 가치 부여할 때만이 인권을 이야기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인간을 객체로 취급하지 않고 자율적인 주체로 보는 생각이고, 타인이 나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며, 더 나아가 보면 나와 다른 처지에 있으며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인간에게 나의 생각을 강요하지 아니하는 것에 그 본질이 있게 되는 것이다. 인간의 기본적 권리 중에서도 사상양심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가 제일로 논해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교육자가 학생의 생각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고 자율적인 판단능력을 존중하는 기초아래 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돕는 것이 인권을 중시하는 교육이며, 그러한 자율적 교육분위기에서 자라난 청소년이야말로 상대방의 권리를 배려하며, 자신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인권과 교육의 문제는 떼어놓을 데야 떼어놓을 수 없는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은 무엇보다도 인권에 있어 기본적인 사상의 자유를 말살하여 하였고, 교육에 있어서는 피교육자의 자율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난 정권들을 반민주적이고 반인권적인 정권으로 부르는 것이다. 정치적, 사회적 분야에서의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여지없이 짓밟혔고 피교육자는 자율성을 잃어버린 채 주입식교육, 입시교육 그리고 출세를 위한 교육만을 강요받았다.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

많은 사람들은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인권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을 기대하였다. 또 이해찬 장관이 교육부장관으로서 취임했을 때, 이 장관 또한 독재정권 아래서 대학시절을 보냈고 이에 저항하다가 형사처벌을 받기조차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개혁이 필요한 부분인 교육부에서 더욱 큰 기대를 하였다. 그러기에 국민의 정부가 지난 1년간 준법서약서니, 국가인권위니 하는 기본적인 문제에서조차 논란을 벌인 것을 두고도 수십 년간 정권을 장악해 온 보수기득권세력과의 갈등의 문제로 보아주려고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의 가장 대표적인 개혁주자라고 불리는 이 장관의 편지파동을 보면서 우리의 동생, 자녀들이 구시대의 정권 아래에서와 마찬가지로의 처지에 있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를 떨쳐 버릴 수 없게 된다.

이 장관은 자신의 행위가 신입생들에게 어떤 행위를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학생운동이 실제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한 것일 뿐이라고 강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아직 대학생활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신입생들에게 학생들의 대표기관에 대하여 부정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그 결과가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 은근히 위협한 것은 강요가 아닐 수 없으며, 따라서 학생운동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해도 그 편지가 가지는 반인권성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교육부 관계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지난 날 군사독재정권과 구 정권아래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기는 하였다. 그것은 그 내용 자체를 떠나 '별일 아닌 것'이었다. 그 정부 자체가 국민들의 인권에 대하여 아무런 생각이 없었기 때문이다. 일상적으로 전면적으로 벌어지던 학문의 자유에 대한 탄압과 인권유린이 어쩌다가 신학기를 맞아 편지 형태로 노골화되었다고 해서 새삼스러이 더 분개할 이유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은 문제가 다르다. 인권을 중시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천명한 정부가 들어섰음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이 장관의 이러한 편지 파동이 요즈음과 같은 시기에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더욱 큰 우려를 가지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로 우리 사회는 아이엠에프라는 태풍 때문에 한동안 정신이 없었고, 경제난을 극복하는 데 총력을 모은다는 취지 아래에서 민주적 정권교체를 이룩한 세력들이 오히려 희생을 각오하고 더욱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숨을 죽여야 하였다. 게다가 새로 출범하는 정권에 으레 따르기 마련인 개혁이니 인권이니 하는 현시적인 정책제시도 1년이 지나면 시들해지는 것이다. 구태가 다시 고개를 들고 숨죽였던 기득권 세력이 새 정부의 실책을 잡아 개혁세력을 걸고넘어지는 시점으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위태한 시점에서 개혁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사람조차 교육에 있어서의 인권의 문제를 깊이 생각치 않고 구정권의 악습을 되풀이하는데 아무런 거리낌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앞날에 대한 큰 근심을 떨칠 수 없는 것이다.

정연순(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정연순]

---

<목록으로>